



주간 통일정세

2012-3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일선집 증보판 출판...선군사상 포함(8/14,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군사사상 등 노작을 모은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이 조선노동당출판사에 의해 출판된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가 14일 보도함.
 - 이번 선집은 1991년12월부터 1992년4월까지 발표한 담화, 서한 등 12편의 저작을 수록했다고 보도함.
 -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더욱 강하게 발휘하자'와 '인민군 강화, 군사의 사회기풍 수립을 중시하자'라는 제목의 문건은 김정일의 군사사상과 군대건설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음.

- **김정은-푸틴, '광복절 인사' 주고받아(8/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67주년을 맞아 인사문과 축전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나는 조선해방 67돌을 즈음해 당신과 당신을 통해 러시아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는 전문을 푸틴 대통령 앞으로 발송함.
 - 전문에는 "나는 항일대전의 피어린 나날에 마련된 전통적인 조려친선협조관계가 최고위급에서 합의된 공동 문건들의 정신과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계속 확대 발전되리라고 믿는다"는 내용이 담김.

- **北매체, 변화 인정..."개혁개방 아니다"(8/16, 우리민족끼리)**
 - '개혁, 개방설을 짓부시며 대고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보수당국은 우리 조국 땅 위에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아전인수격으로 그 무슨 개혁, 개방설까지 내들리고 있다고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16일 주장함.
 - 이 사이트는 "오늘의 전면 앞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의 개혁, 개방설은 말 그대로 물거품으로밖에 될 수 없다"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혁신은 그대로 대결광신자들의 개혁, 개방설을 산산조각내는 폭탄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연평도 포격도발 부대 시찰(종합)(8/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을 주도했던 북한군 무도 방어대를 시찰하고 이 부대에 '영웅방어대'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 열점(무력 충돌) 지역에 위치한 섬 방어대들을 시찰했다"며 "이곳(무도) 방어대에는 연평도 불바다와 더불어 원수들에게 인민군 포병의 본때를 보여준 자랑이 깃들어 있다"고 소개함.
 - 통신은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무도의 군인들은 한 명도 상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김 제1위원장이) 원수들에게 인민군 포병의 본때를 보여준 1포에 영웅칭호를, 무도 방어대에 영웅방어대 칭호를 수여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힘.

- **김정은, 비무장 목선 타고 서해 최전방 '활보'(8/19,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장재도·무도 방어대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최고사령관(김정은)께서는 27마력의 작은 목선을 타고 풍량을 헤치며 기별도 없이 이곳 방어대에 도착했다"고 전함.
 - 19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김 제1위원장의 시찰 모습을 보면 그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일부 측근만을 대동한 채 어선으로 추정되는 작고 낡은 목선을 타고 이들 부대로 이동함.
 - '口-동-82531'이란 번호가 적힌 이 목선에는 김 제1위원장을 포함해 11~12명 정도의 일행이 탑승했으며 경호원으로 보이는 장교 1명과 목선을 운전하는 2~3명 정도의 주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측근 간부들뿐이었음.



■ 김정은동향

- 8/14, 김정은 제1비서, 황해북도 육아원·애육원·양로원에 수십톤의 식료품들과 수십만점의 의약품 전달(8.13,중통)
- 8/14, 김정은 제1비서, 8.14 쿠바 내각 수상(라울 카스트로 루스)의 '北 수해피해 관련 위로 전문'에 대한 '謝意 표명' 답전(8.14,중통)
- 8/15, 김정은 국방총 제1위원장, 8.15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8.15 광복' 67돌 즈음 축전(8.15,중통·중방·평방)
 -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8.15'계기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으며 '운수·가스·전력분야의 쌍무협조'를 언급
 - 인민군 군인 등 양강도內 혁명전적지·사적지 답사 및 답사기간 맹세모임 등 행사들 진행(8.14,중통)
 - 駐北 러시아 대사, 8.14 리룡남(무역상)·궁석웅·기광호(외무성·재정성 부상)·서호원(대외문화연락총 부위원장) 등 초대下 연회 개최(8.14,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최고사령관, 서남전선 최남단 섬방어대(장재도·무도방어대) 시찰(8.18,중통·중·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김영철(대장)·박정천(중장)·안지용(소장)·황병서·김병호(黨 부부장) 등 수행
 - 적들이 우리의 영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그것을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김정은 명령)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 8.14 離任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와 담화(8.14,중통·중방·평방)
- 김형직사범대학 개건 보수대상 준공식, 8.17 최영림(내각 부총리)·김정각(인민무력부장)·최태복·문경덕(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준공사) 등 참가下 진행(8.17,중통·중·평방)
 - 평안북도 軍民용천돼지공장도 새로 건설(8.17,중통·중방)
 -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70여명 청년들이 연간계획 완수 및 평안북도 市·郡들의 수해피해복구 주력 보도(8.17,중방)

나. 경제

- FAO "北 올해 쌀수확량, 가뭄 등으로 7% 감소"(8/16,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작년보다 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전함.
 - FAO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쌀 시장 모니터'에서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을 도정 전 기준 230만, 도정 후 기준 150만으로 예상함.
 -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쌀 수확량보다 7% 줄어든 것이라고 FAO 보고서



가 밝힘.

다. 사회·문화

● 北 "런던올림픽 성과는 민족의 자랑"(8/13, 노동신문)

- 북한은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로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금메달 4개·동메달 5개) 이후 20년 만에 올림픽 최고 성적을 올린 만큼 기쁨이 컸다고 노동신문이 13일 전함.
- 엄윤철·김은국(이상 남자 역도), 림정심(여자 역도), 안금애(여자 유도) 등 4명의 금메달리스트를 집중 부각하고 이들의 경기 장면이나 시상대에 오른 사진을 4장이나 실음.

● 北 수해지역에 설사와 호흡기전염병 환자 증가(8/14, 연합뉴스)

- 최근 북한 평안남도 개천탄광병원과 풍천동외래환자진료소, 평송시 평안남도소아과병원을 방문했다고 평양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RCO)이 14일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들 병원의 경우 기본 장비와 필수 의약품, 담요, 침대 시트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으며 병원 건물 자체도 완전 또는 부분 파괴됐다고 전함.
- 특히 병원에는 부상자, 설사와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 급성호흡기전염병이나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도 최고 300mm 이상 폭우...추가 수해 우려(8/15, 조선중앙통신)

- 14~15일 중부지방에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북한 대부분 지역에 호우가 쏟아져 지역에 따라 수백mm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함.
- 개성시가 309mm(14일 오후 3시~15일 오후 3시)로 가장 많은 강우량을 보이며, 이밖에 황해북도 장풍군이 211mm, 강원도 세포군 155mm, 고산군 132mm, 평강군 138mm, 이천군 126mm, 함경남도 리원군 138mm, 함경북도 김책시 107mm, 평안남도 성천군 104mm, 황해남도 연안군 113mm, 배천군 106mm 등임.

● 北, 신분증 전자카드로 교체 추진(8/16,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주민들의 신분증을 전자칩이 내장된 주민카드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소식통은 현재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공민증을 전자 주민카드로 교체할 것이라면서 "인민보안부가 조만간 전자카드를 보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함.
- 이 전자 주민카드에는 전자칩이 내장돼 있는데 이 칩을 인민보안부의 컴퓨터망에 접속하면 신원 확인과 거주지, 가족관계는 물론 여행기록도 확인할 수 있게 됨.



- **北, 올림픽 선수단에 '국민'급 환대(8/17, 조선중앙TV)**
 - 북한이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로 올림픽 출전 사상 두번째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런던올림픽 선수단을 '국민'급 대우로 맞이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함.
 - 16일 밤 선수단 귀환 장면을 보여주면서 "제30차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1등을 쟁취해 조국의 영예를 떨친 우리 체육선수들을 맞이하기 위해 떨쳐나선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로 차넘치고 있다"고 소개함.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러시아, 라선항 3호 부두 '용도' 다툼(8/13, 연합뉴스)**
 - 북한 라선항 3호 부두를 확보한 러시아가 애초 계약과는 달리 석탄 운송에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함.
 - "러시아가 (라선지구 개발 지연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정상화될 때까지 3호 부두를 석탄을 퍼 나르는 용도로 쓰겠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청정해역인 라선항에서 자연환경을 해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안다"고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이 13일 전함.
- **北 장성택, 옛새간 방중...경협 논의(종합2보)(8/13, 연합뉴스)**
 -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제·외교 분야의 대표단을 이끌고 13일 저녁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5박6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함.
 - 장 부위원장은 일행과 함께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께 중국국제항공의 CA122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내려 40여분후 귀빈 전용 주차장으로 나와 의전용 세단 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감.
- **北中, 황금평·나선 관리위 출범에 합의(종합2보)(8/14, 연합뉴스)**
 - 북중 양국은 베이징(北京) 다포위타이(釣魚臺)에서 황금평·위화도, 나선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회의를 갖고 황금평·위화도, 나선지구의 공동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2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14일 공식 발표함.
 - 양국은 공동 개발의 큰 원칙을 다뤘은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를 해산하되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구성, 공동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관리위원회는 황금평·위화도, 나선 지구 2곳에 별도로 설치되면, 황금평·위화도 지구는 지식집약형 산업단지, 그리고 나선 지구는 선진



제조업 및 물류 기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임.

- 양국은 아울러 황금평·위화도, 나진 지구에 통신시설을 확충하는데 협력하고 통관 편의, 경제개발구에 적합한 법률 및 규정 마련, 그리고 인재 확충에 힘쓰기로 합의함.

● **北·日, 4년만에 정부간 대화 재개(종합3보)(8/14, 연합뉴스)**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예비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14일 전함.
-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이번 접촉을 '북일 정부간 협의를 재개하기 위해 제반 현안을 폭넓게 다루는 예비회담'이라고 규정하며 예비회담 의제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함.
- 일본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외무성 간부와 해외 유골 문제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일본 적십자사 관계자 등이 북한과의 협의에 참여할 예정임.

● **北, 황금평·나선 개발 北中회의 결과 공개(8/15, 조선중앙통신)**

- 중국 베이징에서 전 날 열린 황금평·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조중공동지도위원회' 결과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공개함.
-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등 양측 대표단이 14일 회의에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해 '지대개발 총계획'을 작성하고 항구 및 철도 개선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전함.
- 또 나선-원정도로 개선 공사가 완공 단계에 이르고 관광, 농업협조 등 여러 분야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중국전력 송전을 위한 측량사업도 완료됐다고 덧붙임.
- 통신은 "황금평경제구의 경우 세부계획이 작성된 데 따라 국경통과 지점의 확정 등 개발에 실제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됐다"고 밝힘.
- 또 "위화도지구 개발에 빨리 착수해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개발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데 대한 문제들도 강조됐다"고 통신이 전함.

● **北 "日각료 야스쿠니 참배는 재침야망 발로"(8/15, 조선중앙통신)**

- "(신사 참배는) 군국주의 사무라이들의 전범 죄악에 대한 노골적인 찬미로서 지난 세기 일본에 의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시아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며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논평에서 이 같이 주장함.
- 통신은 또 이번 신사 참배가 "핵무장과 우주 군사화를 합법화하는 법개정 책동이 단행되고 영토팽창 망동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는 속에 감행됐다"며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 반동들의 악랄한 재침 책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맹비난함.



- 세계기금, 北결핵 퇴치에 2천700만달러 추가 지원(8/16, 자유아시아방송(RFA))

 -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약칭 세계기금)이 북한 내 결핵퇴치사업을 3년 연장하고 2천7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세계기금의 앤드류 허스트 대변인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사회가 이달 초 북한 내 결핵퇴치사업의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허스트 대변인은 "결핵퇴치는 북한 내 보건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2010년부터 2년간 진행된 1단계 사업은 북한 당국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함.

- 北 장성택, 랴오닝성 방문...황금평 투자 독려(8/16, 연합뉴스)

 - "이틀 전 베이징(北京)에서 황금평·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지린성 창춘(長春)을 방문한 장 부위원장이 랴오닝성으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고 베이징의 한 소식통이 16일 말함.
 - 실제 장 부위원장 일행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2대가 이날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께 선양 시내 외빈 숙소에서 나와 무장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어디론가 향하는 장면이 목격됨.

- 北 "日정부, 유골문제 정치화"(8/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당국간 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유골 반환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일본인 유골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조선에서 죽은 일본인들의 유골반환을 위한 실무처리문제이고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그러나 일본당국은 지금 회담의 취지와 판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논평'을 통해 비난함.

- 北 장성택, 베이징서 왕자루이 만나(8/17, 신화통신)

 - 중국 방문 중인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장 부위원장이 이날 베이징에서 왕 부장과 회담하면서 양자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 사흘간 중국 동북부 지린(吉林)·랴오닝(遼寧)성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진 장 부위원장이 왕 부장과 회동함에 따라 이들이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의 방중에 관해 협의했을 것이란 관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北, 美에 '9·19공동성명' 파기 위협(8/17, 포린폴리시(FP))

 - 북한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9·19 공동



성명'을 파기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FP가 16일(현지시간) 전함.

-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싱가포르 접촉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미국 측에 올 초 체결된 '2·29 합의'에 대해서는 더는 관심이 없으며, 이전의 비핵화 합의도 재고하고 있다고 '경고'함.
- 당시 접촉에는 북측에서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미국 측에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과 코리 힌더스타인 핵위협방지구상(NTI) 부회장 등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전해짐.

● 北 장성택, 후진타오·원자바오 면담(종합2보)(8/17, 연합뉴스)

-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이 17일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별도로 만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장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후 주석이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직전에 매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노동당과 국가, 인민군의 최고 영도자인 김정은 원수의 친밀한 인부를 전한다"고 말했다며 후 주석은 먼저 "황금평·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개발협력연합지도위원회 회의 개최와 성공을 축하한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근래 북한 일부 지방이 엄중한 홍수 재해로 북한 인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큰 데 대해 공산당,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신해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김정은 노동당 제1서기를 필두로 한 노동당의 영도로 재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장 부위원장은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를 찾아가 원 총리와의 면담했는데 원 총리는 북한의 홍수 피해자에게 애도를 표시하고 김정은 동지와 노동당, 정부의 영도로 북한이 반드시 곤란을 극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 오바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서명(종합)(8/1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8일에 전함.
-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 4240)을 비롯해 4건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함.

● 후진타오, 장성택에 "새 협력방식 찾자" 제안(8/19, 연합뉴스)

-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새 협력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자"고 1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장 부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안했다고 19일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후 주석은 "최근 몇 년 새 중국과 북한 간 무역과 협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투자 분야 등에서 현저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양국이 각자 우위



를 충분하게 이용하고 발휘해 새 협력방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해가자"고 강조했다며 "양국이 황금평·위화도, 나진 경제구 개발을 견고하게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 기타 (대외 일반)

- 北(장성택) - 中(陳德銘), 8.14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지도委 제3차 회의(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국빈관) 개최(8.15, 중통·중방·평방)
 -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구 관리위원회 설립선포 의식이 진행되었으며,
 - △나선경제무역지대 항구 및 산업구 투자에 관한 기본합의서, 北 평안북도인민委-中 랴오닝성 인민정부間 △'공동개발·공동관리를 위한 황금평경제구관리委 설립에 관한 양해문, △공동개발·공동관리를 위한 황금평경제구 기초시설건설공정설계에 관한 양해문' 등 해당 문건들 조인
 - 北-中 공동지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13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중국 상무부에서는 제3차 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 연회를 마련했음.
- 訪中 장성택(조중공동지도委 대표단 단장), 8.17 '후진타오' 국가 주석(베이징 인민대회당) 및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중난하이 자광각)와 담화(8.18, 중통·중·평방)
 - 천더밍(상무부장)·왕자루이(대외연락부장)·장핑(국가발전 및 개혁委 주임)·시에쉬런(재정부장)·왕민·쑤정차이(랴오닝성당委·지린성당 서기) 등 배석
 - 폭우피해 관련,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위문(후진타오), △김정은 영도밑에 조선인민이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라는 것을 확신(원자바오)
 - 중조 두 나라는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견지에서 중조친선을 중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후진타오)
 - 중조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기로 두 경제지대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두 나라사이의 경제무역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중조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임.(원자바오)
 - 장성택, 8.16 왕자루이(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와도 담화(8.17, 중통)

3. 대남정세

○ 당정, 북한 수해복구 지원 검토(종합)(8/17, 연합뉴스)

-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북한의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문헌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외통·통일 당정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 수해와 관련해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전함.

● **北, 을지연습 앞두고 "민족적 성전" 위협(8/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단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는 19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해 '전 민족적 성전으로 전쟁미치광이들이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대전의 역사적 승리를 이룩하고자 말 것이다'는 제목의 합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성명은 "이번 훈련이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하고 우리의 핵 및 미사일기지를 비롯한 전략적 거점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으며 북을 점령하고 민사작전까지 계획하고 있는 종합적이며 최종적인 시험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함.
- 또한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서툰 불질을 해댄다면 그것은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남)**

- 【北 단체 합동성명(8.19)】 '韓美 UFG 합동군사연습' 관련 ' 전면적 對北선전포고, 우리의 영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면 심멸적 반타격으로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위협 (8.19,중통·중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美에 '9·19공동성명' 파기 위협"(8/17,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9·19 공동성명'을 파기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1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싱가포르 접촉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미국 측에 올 초 체결된 '2·29 합의'에 대해서는 더는 관심이 없으며, 이전의 비핵화 합의도 재고하고 있다고 '경고'함. '이전의 비핵화 합의'는 지난 2005년 제4차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한 '9·19 공동성명'을 의미하는 것임.
- 당시 접촉에는 북측에서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미국 측에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과 코리 힌더스타인 핵위협방지구상(NTI) 부회장 등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전해짐. 이와 관련해 한성렬 차석대사와 클리포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는 최근 뉴욕에서 '후속 회담'을 가졌다는 보도도 있다고 FP는 전함.
- 한 소식통은 "싱가포르 접촉의 의제는 광범위했으며, 이 가운데 북·미 관계의 미래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밖에도 핵안전, 핵 안보, 비핵화 감시 방식 등도 논의했다"고 말함. 그는 특히 "북측의 태도가 과거와는 달라졌다"면서 "2·29 합의의 핵심 중의 하나는 9·19 공동성명과 마찬가지로 '동시 행동(simultaneous actions)'이었으나 지금은 미국이 먼저 행동하면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함. 그러면서 북측 참석자들이 내부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파기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그러나 북측은 이번 접촉에서 새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소식통은 "이는 아직 그들이 아직 북미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라면서 "하지만 그들은 과거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신들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그는 이밖에 "이번 접촉에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나 분명히 진행 중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반드시 핵실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임.



나. 미·북 관계

● "북한 변화할 조짐 아직 없어" <美전문가> (8/16, 연합뉴스)

- "지도자와 수도의 외양이 달라졌지만, 정책은 안 바뀌었다. 현 상황은 그대로이며 곧 변화할 것 같지도 않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기 직전이라거나 대단한 경제개혁을 하려 한다는 등의 여러 전망이 나오지만, 변화의 조짐은 아직 없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16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진단함.
-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다는 찰스 K.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대(역사학) 한국학연구소장은 이날 기고에서 북한이 훨씬 바쁘고 더 풍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양 거리에서 차량을 보기 어렵고 가로등도 부족했지만 이제 달라졌다고 소개함. 그는 "북한이 김정은의 정권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표어를 어디서나 볼 수 있다고 말함.
-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에게 김일성의 이미지를 입히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북한 인민들이 김정일 시대의 기근과 다른 실정을 잊고 사정이 나왔던 김일성 시대를 떠올리게 하려는 것 같다"고 함. 그러나 그는 김정은이 머리 모양까지 김일성을 따라 한다고 해도 그가 어떤 정치경제 정책을 펼지를 알 수는 없다고 지적함.
- 암스트롱 교수는 김정은이 막강한 군부와 거리를 두려 한다면서 "군의 영향력을 줄여 군이 반대해온 대대적 경제개혁을 준비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함. 그는 그러나 "지금은 중대한 개혁이 있을 거란 증거는 거의 없다"고 덧붙임. 그는 이어 북한 경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지난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평양 일부 지역이 더 변화한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함. 그는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의 대학들이 2011~2012학년도에 폐쇄됐는데 학생들을 건설 인력으로 동원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함.
- 암스트롱 교수는 평양에 현대적인 4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김정은이 감독한 물놀이 시설도 세워지는 한편 시장도 발달하고 있다고 말함. 그러나 그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수도와 빈곤한 시골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하면서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들이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아 텅 빈 고속도로에서 잠을 자는 풍경이 이따금 보이기도 했다고 전함.

● 오바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서명(8/1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힘.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4240)을 비롯해 4건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함. 일리애나 로스 레티넨(공화, 플로리다주)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



- 어 이달 초 상원에서 가결 처리된 후 지난 7일 백악관에 전달함.
-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올해 다시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재연장안을 공동 발의함.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함. 특히 법안은 최근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미 행정부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 레티넨 위원장은 이날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신선한 면모를 보여주려 애쓰고 있지만 부친, 조부와 같이 지옥과 같은 정치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함. 그는 특히 "자기 주민들을 확대하는 정권은 국제사회와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만한 신뢰를 갖출 수가 없다"면서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북한의 장기적인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함. 이밖에 그는 "이 법은 북한의 인권과 투명성을 증진함으로써 북한의 안보위협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덧붙임.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C)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난 8일 공식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 등을 위해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HRNC는 로버타 코언·앤드루 나치오스 공동의장과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새 지도자에게 폐쇄사회를 개방하고, 주민에 대한 억압을 끝내고, 국제사회 일원이 될 것을 요청해 달라"면서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함.
 -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인권 문제에 공헌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2012 제임스 릴리 스티븐 솔라즈 북한인권 재승인법'으로 명명됐으며, 이들은 지난 2001년 설립된 HRNC의 창립 멤버임.

다. 중·북 관계

● "장성택 방중, 북중 경협강화가 핵심"(8/14,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의 중국 방문과 관련, "북중 경제협력 강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봄.
- 이 당국자는 "장 부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전 북중 경협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고, 김정은 시대에도 북중 경협 사업을 포괄하는 합영투자위원회를 컨트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황금평과 위화도, 나선특구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장 부위원장이 중국 중앙정부에



직접 어필(호소)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중국 측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중국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호응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중국이 어느 정도의 떡을 줄지가 문제"라고 강조함. 이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개혁개방 등) 국제사회 요구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들의 희망을 충족시키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지적함. 그는 장 부위원장에 대해 "북한 지도부 내에서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뭔가를 할 수 있다"며 경제 외적인 부문에서 북중 간 긴밀한 논의 가능성을 제기함.
- 이와 관련, 그는 장 부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 등과의 면담, 경제 시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연스러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냐"고 말함. 이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중단을 언급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북한이 올바르게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함.

● 후진타오, 장성택에 "새 협력방식 찾자" 제안(8/19, 연합뉴스)

-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새 협력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자"고 제안함.
- 19일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후 주석은 1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장 부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함. 후 주석은 "최근 몇 년 새 중국과 북한 간 무역과 협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투자 분야 등에서 현저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양국이 각자 우위를 충분히 이용하고 발휘해 새 협력방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해가자"고 강조함.
- 후 주석은 그러면서 "양국이 황금평·위화도, 나진 경제구 개발을 견고하게 추진하자"고 덧붙임. 후 주석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새 경제관리 개선책인 6·28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됨. 후 주석과 장 부위원장 간에 북중 우의를 과시하는 수사도 오감.
- 후 주석은 산과 강을 맞댄 중국과 북한은 깊은 우호의 전통을 지켜온 이웃국가로 중국은 중북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하며 양국이 고위층 교류를 유지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밀접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전통 우호 협력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가자고 역설함.
- 장성택 부위원장도 앞선 세대 영도자 때부터 형성, 유지돼온 북중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이어간다는 게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굳은 의지라고 화답함. 장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북중 양국이 공동으로 황금평·위화도, 나진 지구 개발을 촉진해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말함.
-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는 후 주석의 장 부위원장 면담 때 나온 발언과 관련, "베이징이 경제발전 방식을 모색하는 평양에 지원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함. 신문은 장성택에 대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북한



경제정책을 이끄는 관리"로 표현해 관심을 삼. 신문은 후 주석의 장 부위 원장 면담에 중국 측에서 장펑(張浬)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세쉬런(謝旭人) 재정부장,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서기, 왕민(王珉) 랴오닝성 당서기,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부부장이 배석했다고 전함.

라. 일·북 관계

● 北, 李대통령 독도 방문·日대응 싸잡아 비난(8/14, 연합뉴스)

-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선.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독도 강탈에 환장이 된 일본의 뻔뻔스러운 추태'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0일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독도를 행각했다"며 "남조선 당국자의 독도행각 계획이 공표되자마자 남조선 각계에서는 민심을 녹잖히며(가리얏히며)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고 밝힘. 이 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사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임.
- 이 통신은 "(이에 대해) 일본 수상과 외상 등이 줄줄이 나서서 유감이니,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느니 하고 호통을 쳤는가 하면 남조선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항의하는 추태까지 부렸다"며 "일본 반동들이 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를 두고 횡포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가져온 결과"라고 비난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도 이날 발표한 백서에서 "얼마 전에 있는 이명박 역도의 독도 행각은 친일 매국노의 정체를 가리고 분노한 민심을 녹잖히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서푼짜리 정치광 대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이어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다그쳐지고 있는 괴뢰들과 일본 반동들의 군사적 결탁책동은 조선반도에 새 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같은 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의 대응에 대한 여러 건의 기사는 내보내면서 "이런 험악한 사태를 빚어낸 장본인은 사대매국에 찌든 남조선 보수패당"이라고 비난함. 이 사이트는 '독도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도고한 자세에 비긴 속심'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당국은 이번 기회에 독도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국제분쟁화하며 영토강탈에 필수적인 실무적인 조치들을 본격화하려고 꾀하고 있다"며 "민족의 존엄과 직결되어 있는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호의 양보나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

● <北, 광복절 맞아 日비난 수위 높여>(8/15, 연합뉴스)

- 북한은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통' 업적을 내세우며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데 주력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8·15는 김일성 주석이 "우



- 리 인민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끝장내고 민족재생의 환희와 사회주의 조선의 새 기원을 맞이한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주장함.
-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서 "강국건설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마침내 '정치사상강국', '강력한 핵억제력을 가진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서는 '경제 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춘. 평양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이 땅 위에 융성 번영하는 경제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다"며 창천거리 완성, 인민극장, 능라인민유원지 등을 성과물로 내세움. 북한은 올해를 '사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 실현되는 '강성대국'의 해로 규정한 바 있지만 상당수 주민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경제 강국'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자제해 왔음. 북한이 거리낌 없이 경제 강국을 부각하고 나선 것은 김 제1위원장이 최근 민생경제 발전을 부쩍 강조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다각적인 경제협력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옴.
 -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일본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임. 노동신문은 "지난날 일본은 2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여성을 강제연행, 납치, 유괴해 일제침략군 성노예로 만들었다"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특대형 반인륜범죄는 역사에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비난함.
 -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궤변"이라고 일축함. 또 "일본 당국자들은 우리나라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며 "우리나라와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미국의 핵전초 기지들을 자국 영토 곳곳에 두고 그 누구의 '핵문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꼴불견"이라고 비난함.
 - 남한당국에 대한 공세도 멈추지 않았음.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보수패당은 집권기간 천안호 사건과 농협금융컴퓨터 마비사태 등 수많은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조작해온 거짓과 모략의 능수"라고 비난함.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흡수통일 야망"이라고 힐난함.
- 정부 "北·日 정부 간 대화 반대 않는다."(8/16,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과 일본이 4년 만에 정부 간 대화를 재개한 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북간 접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함. 조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접촉을 통해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임.
 - 북한과 일본은 지난 9~10일 10년 만에 적십자사 회담을 연 데 이어 오는 29일 일본인 유골반환 문제에 관해 정부 간 예비회담을 개최기로 함. 양국 정부 간의 대화는 지난 2008년 8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협의 이후 4년 만임.



마. 러·북 관계

● 김정은-푸틴, '광복절 인사' 주고받아(8/15,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67주년을 맞아 인사문과 축전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나는 조선해방 67돌을 즈음해 당신과 당신을 통해 러시아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는 전문을 푸틴 대통령 앞으로 발송함. 전문에는 "나는 항일대전의 피어린 나날에 마련된 전통적인 조러친선협조관계가 최고위급에서 합의된 공동 문건들의 정신과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계속 확대 발전되리라고 믿는다."고 내용도 담김.
- 푸틴 대통령도 지난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김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조선해방의 날에 즈음해 당신께 축하를 드린다."며 "우리는 이날을 맞으며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조선인민의 해방을 지원한 소련군 군인들의 용감성에 경의를 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그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적음.
- 또 "우리는 운수, 가스 및 전력분야의 전망적인 대규모 계획들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쌍무협조를 확대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 계획들의 실현은 지역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함.

바. 기 타

● 北, 을지연습 앞두고 "민족적 성전" 위협(8/19, 연합뉴스)

-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을 하루 앞둔 19일 UFG 연습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전민족적 성전'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 미국 정부를 위협함.
- 북한의 대남단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는 이날 UFG 연습과 관련해 '전 민족적 성전으로 전쟁미치광이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대전의 역사적 승리를 이룩하고자 말 것이다'는 제목의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성명은 "이번 훈련이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하고 우리의 핵 및 미사일기지를 비롯한 전략적 거점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으며 북을 점령하고 민사작전까지 계획하고 있는 종합적이며 최종적인 시험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함. 성명은 그러면서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서툰 불질을 해낸다면 그것은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이어 "만약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면서 우리의 신성한 영토와 영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군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 섬멸적 반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힘. 성명은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연평도 포격도발에 나섰던 무도방어대 등을 최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최고사령관께서 단행하신 서남전선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대한 현지시찰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을 원수격멸의 의지로 뜨겁게 끓어번지게 하고 있다"고 강조함.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1면에 실린 '조국통일대전으로 민족최대의 숙원을 풀자는 제목의 글을 통해 UFG 연습을 비난하고 "적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결전진입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힘.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 '위안부-성 노예' 병행 사용" 첫 공개 답변(8/17, SBS)

-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17일) 위안부 명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칙을 묻는 SBS 특파원의 질문에 위안부와 성 노예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 때로는 위안부(comfort women), 때로는 성 노예(sexual slaver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한국과 일본 정부의 두 용어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함. 그는 더불어 "성 노예와 위안부 표현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한일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라고 덧붙임.
- 지난 5월에 펴낸 인권 보고서에서도 위안부라는 표현만을 사용했던 미국 정부가 성 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원칙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위안부 명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던 한 달 전 답변과도 달라진 것임.
- 미국 국무부는 또 매년 펴내는 인권보고서에서 성 노예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미, 미일 양자 대화에서도 항상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함. 미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한일 두 나라와 등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만큼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성 노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은 일본 정부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임.

● 미 해군 7함대 지휘함 블루릿지함 부산 입항(8/17, 연합뉴스)

- 미국 해군 7함대 사령부 지휘함인 블루릿지함(1만9천600t급)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17일 부산항에 입항함. 블루릿지함 장병은 이날 오전 한국 해군 장병의 환영을 받으며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도착함. 이들은 오는 19일까지 부산에 머물면서 한국해군 장



병과 친선 체육 활동 등을 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국립부산국악원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됨.

- 18일과 19일에는 한·미 양국 해군장병 50여명이 부산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희락원과 성애원을 방문, 시설보수와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임. 블루릿지함은 지난 3월에도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작전기지를 방문함.

나. 한·중 관계

● 김영환 씨 정밀검진… 고문 관련 흔적 못 찾아(8/14, 동아일보)

-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받은 고문 증거를 찾기 위해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고 있음. 김 씨는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병원 측은 "시간이 많이 흘러 별다른 고문 관련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짐. 김영환 고문 대책회의는 고문에 대한 김 씨의 진술과 건강검진 결과까지 포함해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고문에 대한 특별 보고관'에 추가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임.

● 한국인 마약사범, 中서 사형 선고 받아(8/14, 동아일보)

- 중국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이 사형을 선고받음. 외교통상부와 주(駐)선양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14일 오전 열린 공판(1심)에서 히로뽕 10.3kg을 불법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신모(51) 씨에게 사형을 선고함. 또 신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2년 뒤 무기징역으로 전환 가능)을 선고함.
- 신 씨 등 3명은 마약 관련 범죄로 검찰에 의해 국내에서도 수배된 상태임. 신 씨의 사형 선고는 2심인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되며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 인가가 필요함. 최종심인 2심 재판까지는 통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됨.
-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최근 1Kg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 판매하는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선고함. 최근 중국에서 외국인인 마약 범죄로 사형된 사례는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지난해 필리핀인 3명 등 임.
- 외교부 당국자는 "신씨 등에 대해 다각도로 중국 당국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면서도 "밀수량 규모와 엄격한 법집행 동향을 감안할 때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함. 신 씨를 포함, 현재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3명임. 지난 5월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53) 씨 등 2명은 현재 상소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신 씨도 상소할 것으로 전해짐.
- 중국에서는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은 한국인 신모 씨가 2001년 사형된



바 있음. 이 사건은 한국인이 유일하게 외국에서 사형된 사례지만 당시 정부는 형 집행 이후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비판을 받음. 중국에 수감된 우리 국민 346명 중 27.4%(95명)가 마약 관련 사범임.

다. 한·일 관계

● **李대통령 "일본 사과 안하니 응어리 안 풀리는 것"(8/13,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 방문에서 일본의 무성의한 역사인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13일 전해짐.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셔서 영구히 해결이 안 된다."며 "일본이 나쁜 전쟁을 일으키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데 그러지 않으니 응어리가 안 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핵심 관계자가 전함. 이 대통령은 또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고도 말함.
-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의 의미를 환경 문제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잘못된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는 우리 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임. 이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한 뒤 청와대에서 동행자들과 만찬을 열고 "이런 저런 눈치를 보면 독도에 못 갈 것 같았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짐.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거나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너무 무성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독도가 우리 땅으로서 일종의 지방 순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시끄러울 것이 라는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으며, 이젠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임.
-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독도를 방문한 만큼 해양시설물 건설과 같은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조치를 잠정 중단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서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환경파괴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추진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함.
-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 영유권 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음. 다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에는 우리도 이에 맞서 상응하는 조치로서 재추진 할 여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정치 때문에 한국의 축구선수 동메달 연단에서 떨어져...(8/13, CNN)**

- 한국의 축구선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배너를 "비고의적"으로 흔듬으로 인해 올림픽 동메달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졌음. 경쟁자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올림픽위원회(IOC)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 승리한 이후 메달을 수여받지 못했다며 한국 축구 협회가 전했다. 미드



필터인 박종우 선수는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주장하는 슬로건이 쓰인 사인을 들고 있는 모습이 경기 직후 사진이 찍혔음. KFA의 관계자는 FIFA에 의해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목요일까지 제출할 것을 부탁받았다고 전했다.

- "사진을 통해 입증되었듯이 박 선수의 행동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사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관계자는 CNN에 말했다. "당신이 사진에서 보듯 그 사인은 경기 중에 팬이 가지고 있었으며 박 선수는 그것을 팬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입니다."라고 말함. 관계자는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시기에 박 선수가 메달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임. 많은 한국인들은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즈에 IOC가 과민 반응한 것이 아니냐며 항의하고 쇄도하고 있음. 만약 그가 메달을 수여받지 못한다면 올림픽메달 수상자에게 부여하는 병역 면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한국과 일본사이의 외교적 긴장감이 상승되었음. 지난 주,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한국인들에게는 독도로 일본인에게는 다케시마라고 알려진 작은 섬을 방문함. 금요일, 일본은 주한 대사를 소환하였으며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며 협박함. 한국은 그 섬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주둔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외무장관인 고이치로 겐바는 "그 섬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따른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함.
 - 독도/다케시마 영토분쟁은 남중국해의 영토분쟁과 함께 지역 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슈로서 아시아의 냉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토분쟁 중 하나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모두 지역 내의 권리를 주장해오고 있으며 최근 몇 달간 국가들을 둘러싼 긴장감이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인 가수,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섬까지 수영해...(8/14, CNN)**
- 한국의 유명 록 가수는 일본해 혹은 동해의 분쟁지역인 작은 바위섬까지 헤엄쳐서 도달하는데 몇 시간 남지 않았음. 김장훈은 월요일 울진항에서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서로 주장하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화산섬인 독도를 향해 떠난 아마추어 선수들 중 한명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지 67주년 되는 날을 맞아 그들의 55시간, 230 킬로미터의 릴레이 수영의 대장정은 수요일에 끝이 날것으로 예상됨.
 - 물에 입수하기 전 가수 김장훈은 "제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독도가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이상, 그러한 말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리포터에게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렇듯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벤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에 방문한 바로 다음날 일어남.



- **타케시마 문제 제소, 한국 측에 동의를 요청(8/17, 아사히신문)**
 -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17일 오전의 기자회견에서, 타케시마(한국명·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를 한국 정부에 제안한다고 발표함. 1965년의 국교 정상화시에 주고받은 합의 문서에 근거하여 조정을 제안하는 일도 분명히 함. 타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목적임.
 - 겐바 코이치로 외상은 당일 오전, 외무성에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였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동의 할 것을 요청 함. 이명박 대통령이 타케시마에 방문하소 천황의 방한의 조건으로서 사죄를 요구하거나 했던 것에 대하여 "최근의 일본에 대한 언급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항의함. 후지무라도 회견에서 타케시마 방문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함.
 - ICJ로의 분쟁해결 절차에는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외교 문서를 보내 한국 측에 정식으로 동의를 요구할 예정임. 그러나 한국 측은 응하지 않을 생각으로, 재판이 시작될 전망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또한, 후지무라는 회견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영토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강화를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함. 더불어 타케시마의 조사 연구나 여론을 이끌 민간수준의 대처를 지원할 생각도 나타냄.

- **〈韓日 공방전 계속..갈등 장기화 불가피〉(8/19,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계속하면서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경색된 한일 관계는 이 대통령의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와 위안부 문제 언급에 일본이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21세기 들어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냉각됨.
 - 일본은 17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우리 정부에 50년 만에 다시 제안했으며 정부는 이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며 맞불을 놓음.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일축하면서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곧바로 외교채널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보내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임.
 -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유감'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짐. 대응 방침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간 우리 정부는 노다 총리의 서한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장을 보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짐.
 - 일본의 공세에 맞서 우리 정부는 독도에 국민의 수호의지가 담긴 표지석을 건립함. 경상북도는 19일 오전 독도의 동도 망양대에서 맹형규 행



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도지사, 이병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명의의 '독도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함.

- 일본은 특히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 이후 한국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됨.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모든 부처에 한국 관련 정책과 교류사업 등을 총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다음날에는 노다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함. 일본 정부는 한국이 ICJ 제소 제안을 거부할 경우 단독제소를 통한 압박과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 등도 검토 중임. 아울러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 또는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방침 철회,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 선출시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은 독도 문제와는 별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이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발로 규정,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경우 당분간 양국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쉽게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일본에서는 반한(反韓) 여론이 감지되고 한국에서는 반대로 반일(反日) 감정이 쌓여가는 등 이번 사태가 국민 감정싸움으로 까지 번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음.

라. 미·일 관계

● CSIS연구그룹, 美-日 방위협력 강화 촉구(8/16, 연합뉴스)

- 미국의 외교·국방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전직 공직자들이 일본에 대해 미국과의 방위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15일 발표함. 이들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설치한 연구그룹 이름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은 이른바 "집단적 자위"에 대한 금지를 완화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허용해야한다고 촉구하고 기존의 제한은 "동맹에 장애가 된다"고 말함.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외부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없다는 "아이러니"를 시정해야한다고 말하고 양국 군대가 지난해 3월11일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사태 후 함께 구호 활동에 나섰다든 점을 상기시킴.
-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온 일본이 평화유지군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확대해 다른 나라 군대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도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함. 보고서는 일본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정찰활동을 확대하고 이란이 호르무즈협 봉쇄를 시사 할 경우 기뢰제거함을 파견할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말함.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의 하나(미일 동맹)가 그 건강과 후생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미일동맹의 '표류'를 경고함.
- 이 보고서 작성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지미 카터 및 빌 클린턴 행정부에 참여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가 주도함. CSIC 연구 그룹은 미국 정부 정책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와 유사한 보고서들이 미국 정부 정책 입안의 토대로 활용돼왔음.

마. 중·일 관계

● "MB 독도 갔다. 우리도 센카쿠 가자"...초간장 (8/13, 헤럴드 경제)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를 지방순시 차원에서 방문하자 중화권이 큰 자극을 받고 있음.
- 지난 1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釣魚島: 다오위다오)열도를 사들여 국유화를 구상 중인 가운데 홍콩의 한 민간단체 '홍콩보조행동위원회(香港保釣行動委員會)'의 어선이 센카쿠 상륙을 목표로 홍콩을 출발했다고 보도함. 이 단체는 어선이 출항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했다. 중국도 행동을 일으켜야한다"고 말함. 홍콩정부는 센카쿠열도로 향하는 항의 선박을 지난 2009년 이후 6차례나 저지했었음.
-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센카쿠열도는 일본 국회의원이 이 섬에 상륙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짐. 이 위원회가 참가하고 있는 '세계중화인 보조연맹'은 홍콩·대만·중국 본토로부터 항의선을 모아 대만 지룽(基隆)항에 집결, 이틀 후 센카쿠열도를 목표로 출항할 계획으로 있음.
-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본 내각은 자위대를 출동시켜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이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 중국·대만 다오위다오 시위대 출항 불허(8/14, SBS뉴스)

- 홍콩 민간 활동가들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다오위다오를 향해 항해중인 가운데, 애초 예정됐던 중국과 대만 활동가들의 합류 계획이 당국의 저지로 무산됨. 중국 활동가 천뒤웨이는 당초 13일 푸젠성 샤먼을 출발해 다오위다오로 항해할 계획이 철회됐다고 밝혔지만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 대만에서도 활동가 6명이 14일이나 15일 홍콩 활동가들과 합류한다는 일정 아래, 지룽 항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대만 당국에 의해 출항이 저지된 것으로 알려짐. 홍콩 다오위다오보호행동위원회 소속 선박인 '카이풍2호'는 당초 대만 인근 해역에서 대만과 중국의 활동가 선박과 합류한 뒤 다오위다오 수역에서 합동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음.
- 홍콩 활동가들은 단독으로 다오위다오로 직행할 예정임.

● 중국제관계 전문가 "다오위다오 관련 日주장은 궤변"(8/14, 인민일보)

- 7월 17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명나라 때부터 다오위다오(釣魚島)가 중국 고유의 영토였다는 중국의 주장은 근거 없다며 이를 비난하는 글을 실음. 해당 글이 '논거'라며 내세운 두 가지 이유는 모두 상투적인 궤변



입. 그 중 하나는 중국의 고대 문헌을 왜곡 해석해 얻은 소위 '새로운 발견'이었음. 그러면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과연 누구의 견해가 근거 없는 궤변일까? 오늘 이 글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바임.

- ◆ 일본의 궤변 1) "1970년 중국은 댜오위다오 근처에서 석유를 발견한 후부터 댜오위다오가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는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왜곡된 주장이며 사실상 중국은 1372년 유구(琉球) 국왕 책봉부터 1894년 갑오전쟁까지 500여 년 동안 댜오위다오의 주권을 소유하며 실질적 지배와 항해, 조업 및 해상 방위 순항을 실시해 왔음. 그러다 청(淸)나라 때부터는 댜오위다오가 행정관할상 타이완의 부속 도서가 됨. 그래서 중국은 중일 갑오전쟁에서 패한 후인 1895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통치하는 기간 일본 측에 댜오위다오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임.
-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20세기 70년대 초 미국이 '신탁통치'를 명분으로 유구(琉球) 및 댜오위다오를 점령하는 동안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통치를 줄곧 반대했고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해 왔음. 20세기 60년대 말, 미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의 해양 석유자원을 제멋대로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은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고 중국의 영토와 해양 자원에 다른 국가가 마수를 뻗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1971년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 반환 관련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 미국은 댜오위다오의 행정 관할권을 불법으로 일본에 넘겼고 중국은 또 이에 대해 반발하며 이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냄. 댜오위다오는 타이완의 부속도서이며 타이완은 중국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임.
- 1972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와 중일 국교 정상화를 논의할 때 논쟁거리는 잠시 접어두고 우선 중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자고 말함. 사실, 석유를 발견하고 나서 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중일 간에 존재하는 영토 문제를 부인한 것은 중일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반대했던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이었음. 그리고 그때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가 반(反)중국 우익 의원들로 구성된 '청풍회'를 조직했고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사토 에이사쿠 내각에 적극 협조함.
- 현재 일본 정부의 댜오위다오 문제 관련 입장은 사토 에이사쿠 내각 때로 돌아가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과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내각이 중일 국교 정상화와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실현하며 중국 측과 댜오위다오 논쟁을 접어두기로 했던 그 정치적 목계를 부인하려 드는 것과 같음. 이러한 변화는 1996년 일본이 UN 해양법협약에 가입한 후 댜오위다오 열도를 기점으로 반경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정된 후 시작됨. 오늘날 사토 에이사쿠는 세상에 없지만 대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가 왔음. 이시하라 신타로는 예전보다 더 미쳐 날뛰는 듯하며 이러한 현상들은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은 중일 관계에 비정상적인 국면을 초래할 것임.



- **中, 주중일본대사 초치...중국인 14명 무조건 석방 요구(8/16, 인민일보)**
 - 중국의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은 15일,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를 긴급 소집하고, 아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일본 외무성 부 대신과도 전화 통화를 통해 일본 측이 다오위다오(釣魚島)에서 불법적으로 중국 국민을 체포한 일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함.
 - 푸잉 부부장은 다오위다오와 인근 도서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거듭 강조하고, 일본 측이 체포한 중국 국민 14명의 안전과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함.
 - 일본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바오다오(保釣, 다오위다오 수호)행동위원회' 단체 소속 14명이 15일 오후 다오위다오에 도착했고, 그 중 7명이 다오위다오 해안에 상륙함. 이때, 일본 오키나와현 경찰 측과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할지역 해상보안본부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위반을 이유로 먼저 5명, 후에 9명, 총 14명의 홍콩 '바오다오' 인사들을 체포했다고 전함.

- **中·日, 이번엔 센카쿠 위령제 충돌(8/19, 연합뉴스)**
 - 일본과 중국이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 상륙으로 충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인의 센카쿠 상륙으로 대립함. 19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의 초당파 의원으로 구성된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의원 8명과 지방의원, 유족 등 150여명은 선박 21척에 나눠 타고 이날 새벽 센카쿠 주변에 도착함.
 -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센카쿠 해역에서 선박 침몰로 숨진 사람들의 해상 위령제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센카쿠로 향했지만, 사실은 중국과 대만 등의 센카쿠 영유권 주장에 대항해 일본 땅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임.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센카쿠 상륙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위령제 참가자 가운데 10명은 이날 오전 센카쿠에 상륙함.
 -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 대변인은 18일 성명에서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본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힘. 친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이 다오위다오와 관련해 벌이는 모든 일방적인 행동들이 불법적이며 무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그러한 행동이 중국의 영유권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이런 가운데 홍콩과 대만 시위대가 다시 센카쿠 상륙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해 일본과 중국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임.
 - 지난 15일 센카쿠에 상륙했다가 체포돼 이들 만에 강제송환된 홍콩 시위대는 10월에 다시 센카쿠에 상륙하겠다고 밝힘. 대만의 활동가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 홍콩의 단체들과 공조해 센카쿠 상륙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함. 센카쿠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반일 시위도 확산되고 있음.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에만 중국의 25개 도시 이상에서 중국의 센카쿠 영유권을 주장하는 반일 시위가 예정돼 있음.



- 센카쿠 문제로 일본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73) 주중 일본 대사를 10월에 교체하기로 함. 후임에는 니시미야 신이치(西宮伸一. 60) 외무심의관(경제담당)이 유력함. 일본 정부는 정기 인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니와 대사가 지난 6월 도쿄도의 센카쿠 매입 계획과 관련 외국 언론에 "도쿄도가 센카쿠를 매입하면 일-중 관계가 매우 중대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고 발언한 데 대한 문책 성격이 강함. 자민당 등 야권은 이 발언이 일본의 영토에 대한 국익을 해쳤다고 강력하게 해임을 요구해옴.

바. 일·러 관계

● 러시아 실효지배 쿠릴열도, 일본 속수무책(8/17, 헤럴드 경제)

- 일본은 '북방영토'라고 주장하는 쿠릴열도를 러시아로부터 반환받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음. 일본은 러시아가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로 쿠릴 남부 2개 섬의 일본 인도를 언급했던 1956년의 일·소련 공동선언을 토대로 쿠릴열도 반환 협상을 진행 중임. 하지만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쿠릴 열도에 대한 반환 협상은 진전이 거의 없음. 러시아가 일본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정비와 개발 등 실효 지배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일본으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임.
- 러시아는 국가 프로젝트인 '쿠릴제도 사회경제 발전계획(2007~2015년)'에 따라 약 1조원을 투입해 도로, 공항, 항만 등을 정비하고 있음. 러시아가 쿠릴열도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인구증가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임. 이 사업에는 한국과 북한, 중국 등의 외국 근로자 1500명이 참여 중임.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도 지난 7월초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 섬을 방문해 개발을 독려함. 이에 앞서 메드베데프는 대통령이었던 지난 2010년 2010년, 러시아 행정부 수반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강력한 반발 속에 쿠릴열도를 방문한 바 있음. 일본은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격앙했지만 러시아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음. 일본은 지일파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일본은 돈을 앞세운 경제 협력을 미끼로 내세웠지만, 석유 등 자원 수출을 통한 경기 회복으로 달려가 넘치는 러시아는 시큰둥함.
- 특히 7월말 일본 내각이 쿠릴 열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 방위 백서를 승인한 후, 러시아가 태평양함대의 전함 2척을 쿠릴열도에 파견하기로 함에 따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음. 러시아 전함은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쿠릴열도를 돌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숨진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여할 예정임.



사. 기. 타

● **대만도 총통 분쟁 지역 방문 요구 봇물(8/13, 헤럴드경제)**

-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만 정치권에서도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영유권 분쟁 도서 지역을 방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음.
- 13일 자유시보의 온라인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의 집권 국민당 린위팡(林郁方)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마 총통이 적당한 시기를 택해 타이핑다오(太平島)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함.
- 타이핑다오는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에 있는 가장 큰 섬으로, 베트남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과 복잡하게 얽혀 각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임. 타이핑다오는 대만 남서부 해안에서 1600km 떨어진 곳으로, 대만은 타이핑다오에 해안순방서(해경) 병력을 파견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하지만 난사군도 자체가 중국부터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인근 국가들이 자국 영토에 가까운 지역이라며 영유권 내세우는 곳임.
- 대만에서는 그 동안 총통이 직접 이곳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수차례 나왔으나 주변국과의 갈등 등을 우려해 아직 방문이 이뤄지지 않음. 이러한 차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총통 방문에 대한 요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임. 제 1야당인 차이항량(蔡煌琅) 민진당 입법위원 역시 "영토 분쟁에 대응하려면 평화선언 같은 유화 제스처로는 부족하다"라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차이위원은 한 술 더 떠 다음 달 중으로 예정된 타이핑다오 실탄 사격 훈련에 맞춰 마 총통이 이곳을 방문할 것을 제의함.

● **"대만, F-16 구매 수량 축소 美에 통보"(8/13, 연합뉴스)**

- 중국의 반발 속에 추진해온 대만의 전투기 추가 도입 계획에 기류 변화가 나타남. 대만 당국은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미·대만 연례 고위급 전략 대화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16 C/D 전투기 구매 규모를 66기에서 24기로 줄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중국시보가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함.
- 이처럼 전투기 도입 규모를 축소한 것은 국방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짐. 최근 주력 기종인 145대의 F-16 A/B 기종 성능 개량 사업에 38억 달러(약 4조3천억원)를 투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 예산 지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표면 논리인 셈임.
- 하지만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대만 당국의 이런 움직임이 최신예 스텔스기인 F-35 도입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함. 대만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이와 관련, "F-35가 방위 목적상 요구를 가장 충족시키는 전투기이다"라거나 "F-35의 단거리 이륙 능력은 군의 작전 능력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관심을 표시함.
-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반발과 기술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투기 판



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美·日·러, 中 겨냥 민관 안보협의체 구성(8/14,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러시아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4일 보도함.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러시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을 의식한 해양 안보와 북한 문제 등을 과제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함.
- 3국 간 안보 협의체는 처음이며 이 협의체에는 정부 측에서 외교·국방 당국의 심의관급 관료, 민간에서는 일본의 경우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러시아에서는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등의 전문가가 참여함.
- 연간 한차례 정도의 정기 회의가 열리며, 향후 공식적인 정부 간 협의체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협의체에서는 해상 안보와 아시아 지역으로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북한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임. 해상 안보 분야에서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함.

● **"독도는 韓 영토이자 日침략상징 벗기"〈中전문가〉(8/17, 연합뉴스)**

- 중국의 도서(島嶼)분쟁 전문가가 한국인에 있어 독도문제는 영토 주권 행사이자 일본의 침략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말함.
- 16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치우스(求是)'에 따르면 중국 국가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 장하이윈(張海文) 부소장은 '전 세계 해양 도서 분쟁 들여다보기'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일본도 독도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장 부소장은 전 세계적 도서 분쟁을 개괄하면서 "도서 분쟁의 배경에는 장기적인 역사적 시연이나 민감한 민족 감정, 경제적 이익, 미래 대비 등 다양한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독도문제를 언급함.
- 그는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문제는 20세기 초인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을 통해 한국의 동부 해안에 있는 작은 섬(독도)을 점령하면서 시작됐다"며 "2차 대전 이후에는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진함. 그러면서 "한국인에 있어서 독도는 신성한 영토일 뿐만 아니라 일본 침략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상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함. 장 부소장은 이어 "독도문제에는 주권을 귀속시키려는 것과 역사적인 설욕을 하려는 측면의 민족적 감정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격렬해지고 문제 해결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일본 측에서는 독도에 대해 '예로부터 일본 영토였던 땅'으로 여기고 있다"며 "일본은 중국, 러시아 등과도 도서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양보하면 다른 곳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봄. 그는 또 도서 분쟁은 세계적으로 60여 개국이 겪는 난제이고 상당수가 역사적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



석했다.

- 중국과 일본 간에 일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해서도 "19세기 일본의 식민지 침략의 유산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의 전범행위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주장함. 그는 "도서 분쟁 당사국은 전략상 일정한 외교적 조정 공간을 남겨두기 마련이고 격렬한 도서 분쟁의 이면에는 당사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요인과 장기적인 전략적 의도도 있다"면서 "도서 분쟁은 단기 해결책이 없는 장기적인 문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